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지난 12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초청간담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내년 SOC 예산 24兆 수준으로 늘려야”

(최근 5년 평균)

건설업계가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공공사 물량이 가뭄이나 없는 데다, 올 하반기부터 민간주택 수주가 급감하면서 수주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노후 인프라시설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내년 SOC 예산을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SOC 예산이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표면적으로 양호해 보이나, 중도금 대출규제

업계 “公共물량 가뭄에 민간 주택 수주도 급감”

노후 인프라시설 관리 관련 법률 제정도 건의

조 위원장 “요구 신중 검토, 건설산업 발전 지원하겠다”

와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SOC 예산 축소와 해외 수주 급감 등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고 말했다. 이어 “SOC 예산 확충과 최근 서울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조례 제정과 같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SOC 예산 확대를 요구한 데는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SOC 예산은 지난 2010년 25조 1000억원에서 △2013년 24조 7000억원 △2016년 23조 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올해 추정에선 SOC 예산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20조원으로 올해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건설업계는 ‘노후 인프라시설 체계적 관리·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국민 불편을 덜고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것

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지자체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우현 새누리당 간사, 윤영일 국민 의당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삼규 회장을 비롯해 5개 시도회장 및 업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하반기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내년 SOC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도위 차원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간담회 주요 내용은

이번 건설업계와 국토위원장 간담회는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원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날 SOC 예산 확대와 노후 인프라 개선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수 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은 “아직까지 시장가격이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은 절반에 불과하고,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20% 이상 낮은 상황이다.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품질 안전을 위해 무자격자

표준시장단가 적용 유예기간 연장 工期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을

무자격자 시공 제한·소규모 복합공사제 폐지 주장도

시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욱 건설 대전시회장은 “건설법에 건축주도 직영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넓어 사실상 무등록업자에 위장 직영되고 있다.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 건축

주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직영 시공 전면적 범위를 8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생산체계를 훼손하는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종용 건설 서울시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는 중소종합업체 생존권을 위

협하고 업역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역시 업역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불분명, 계약이행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을 위해 건설업등록 불법대여를 근절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용환 건설 경기도회장은 “건설업을 등록한지 1~2년밖에 안된 업체가 수개월간 수백건을 착공하는 등 대여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서민 주거안전을 위협하고 건설시장 왜곡,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400兆

내년 예산 역대최대 전망 속 SOC 요구액은 20조원 그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가운데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386조4000억원)보다 3~4% 정도 증액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

애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39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함에 따라 4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또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늘리자는 데 의견을 모아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2010년대 들어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내년 국방 예산은 당정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해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20조원으로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SOC 예산은 지난 2010년 25조1000억원에서 △2013년 24조7000억원 △2016년 23조7000억원으로 감소세에 있고, 올해 추경안에선 제외됐다. 추경에서 SOC 예산이 빠진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채희찬기자 chc@